

NSIP

<http://www.eai.or.kr>

R

Report

National Security Panel

EAI 외교안보센터 : 국가안보패널 정책보고서 ⑮

[한반도 평화체제 로드맵]

강압외교

후원

조선일보

국가안보 패널 명단

▣ 위원장

하영선(서울대학교)

▣ 감사위원

전재성(서울대학교)

▣ 위원

김병국(EAI원장, 고려대학교)

김성한(외교안보연구원)

김태현(EAI외교안보센터 소장, 중앙대학교)

김현호(조선일보)

박종철(통일연구원)

박철휘(서울대학교)

서병훈(숭실대학교)

손 열(중앙대학교)

신성호(서울대학교)

오승렬(한국외국어대학교)

이상현(세종연구소)

이태환(세종연구소)

장 훈(중앙대학교)

정진영(경희대학교)

차두현(한국국방연구원)

최 강(외교안보연구원)

김하정(EAI)

정한울(EAI)

조정은(EAI)



EAI
동 아 시 아 연 구 원

동아시아연구원 외교안보센터

Tel No. 82-2-2277-1683

Fax No. 82-2-2277-1684

<http://www.eai.or.kr>

강압외교

(요약문)

발간일: 2006년 7월 12일

대표집필: 신성호 (서울대)

2005년 9월 베이징 공동선언 이후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던 미국의 강압외교가 2006년 상반기 들어 다시금 활발해 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은 다자 회담을 통한 협상과정에서 북한이 기만적인 모습을 보일 경우 강압외교의 명분을 쌓기가 좋다는 매과 협상전략에 바탕을 두고 있다.

국제정치 이론에 의하면 강압외교의 전략은 위협수단의 종류와 정도, 요구와 위협의 긴박성에 따라 크게 "시협과 전망", "점진적 나사 조이기", "암목적 최후통첩", "최후통첩"의 네 가지로 나뉘어 진다. 한편, 강압외교의 일반이론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요구조건을 수용케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압박과 함께 유인책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은 핵 포기든 도발이든 북한

의 본색을 드러내기 위한 매과 협상전략에 따라 이미 전방위 적인 압박외교를 서서히 시행하고 있다. 아직 6자 회담의 결렬이 가시화 되지 않은 채 당분간 미국의 강압외교는 낮은 차원의 압박전략 속에서 시행될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최근의 움직임은 미국이 압박의 강도를 서서히 높여감으로써 직접적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것은 피하면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암시하는 쪽으로 서서히 전환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와 동시에 평화 협정 논의 등의 회유책도 동시에 제시하면서 북한의 회담복귀와 협상을 촉구하는 한편 회담 실패 시 본격적 강압외교의 명분을 축적하고 있다.

2005년 9월 미국 재무부는 마카오의 북한 대외교역 창구인 방코텔 아시아은행에 대한 제재와 함께 북한 자금을 동결하였다. 2006년 5월에는 북

한 탈북자에 난민 지위를 부여하고 ‘정치적 망명’을 허용함으로써 북한 인권법 발표 이후 가장 강도 높은 인권압박 조치를 취하였다. 지금까지 취해진 미국의 강압외교는 "시험과 관망" 및 "점진적 나사 조이기" 전략의 혼합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6자 회담을 위한 각국의 노력이 아직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강압외교로 가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에 기초한다.

현재 베이징 6자 회담의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그 속에서 북한이 이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사태를 악화시키거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협상의 파기선언 등 전면적인 벼랑 끝 전술로 나올 경우 이에 대한 미국의 강압외교와 압박은 전격적으로 가동될 것이다. 여기에는 북핵 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과 전면적 경제제재, 정치적 망명을 이용한 대량의 탈북자 유도,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봉쇄 등이 사용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현재 북한은 미국의 압박외교에 강한 반감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인권법안에 대해서는 북한체제를 압살하기 위한 정책으로 부시 행정부를 강력

하게 비판하였다. 최근의 금융제재와 위폐 문제에 있어서도 이를 북핵 문제와는 별도로 취급하려는 미국의 입장에 반발하여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베이징 공동선언문의 취지에 상반되는 이중적 조치로 비난하면서 6자 회담 재개를 거부하는 빌미로 삼고 있다.

한편 가중되는 미국의 강압외교에 맞서기 위한 방법으로 북한은 남한과의 민족공조를 더욱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 충돌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그 모든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려 할 것이다. 동시에 남한으로 하여금 미국의 전쟁도발 음모에 가담하지 말 것을 촉구하면서 민족공조를 호소하는 평화공세를 펼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평화협정안, 혹은 중재를 받아들여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것은 미국 적대정책의 확실한 포기와 수령체제옹호이며 이것은 한국이 담보할 수가 없는 사항이다.

궁지에 몰린 북한이 어쩔 수 없이 협상에 본격적으로 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경우에도 그 절차와 방법을 둘러싸고 지루한 줄다리기를

가 재연되는 가운데 과연 진정한 핵 포기를 위한 것인지, 아니며 단순히 압박을 완화하고 한국을 포함한 국제여론의 동정을 사기 위한 것인지를 구분할 것인지를 힘들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완전히 핵을 포기하는 검증 과정 자체가 상당히 고통스러운 조건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따라서 압박에 의한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그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할 것이다.

주변국의 입장을 볼 때, 일본은 미국의 강압외교에 가장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강압외교에 가장 부정적이다. 러시아와 유럽연합의 경우는 일본과 중국의 사이에서 본인들이 협상의 새로운 중재자 역할을 할 용의가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이들 중 역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중국의 입장변화이다. 현재로써 중국은 북한이 공식적으로 핵 개발을 선언하거나 실험하지 않는 한 급격한 상황변화보다는 현상유지를 선호한다. 미국이 본격적인 강압외교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중국이 기본적인 지원을 계속하는 한 북한에 대한 효과는 미지수이다.

한국정부는 미국의 강압외교에 대한 회의적인 자세를 보인다. 한국정부는 미국의 강압외교가 북한으로 하여

금 회담을 거부하고, 핵 포기 자체의 의의를 의심케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파악한다. 이는 회유와 함께 압력이 북한의 핵 포기를 중용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믿는 미국정부의 매과협상전술과 기본적으로 다른 입장을 보인다. 한국정부의 태도는 효과적인 협상을 위해서는 강압과 회유가 함께 결합되어야 한다는 외교협상의 기본 이론을 간과하는 경향을 보인다. 강압외교도 그야말로 외교의 일부이며, 강압이 때로는 외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기본명제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북핵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한미 양국이 서로의 협상전략을 상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양측이 공조에서 얻을 수 있는 시너지효과를 반대로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에 대해 북핵 문제를 보다 유연하게 접근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강압외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 강압과 회유의 적절한 조화는 한국이 주장하는 회유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도 더욱 중요하다. 한국의 이러한 입장변화는 미국에 한국의 입장을

설득함에 있어서도 보다 힘을 실어줄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얻어지는 한미간의 대북 정책공조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양국의 노력에 상승의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강압외교

발간일: 2006년 7월 12일

대표집필: 신성호 (서울대)

2005년 9월 19일 제4차 베이징 6자회담은 북핵의 포기과 이에 상응하는 북미관계개선을 원칙적으로 포함하는 포괄적인 공동선언을 이끌어 내었다. 그러나 회담 이후 북미 양측이 합의문의 의미와 절차를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면서 북핵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이다. 특히 북한이 합의문의 구체적 실천을 논의하기 위한 추가 교섭에 불응하는 가운데, 미국의 북한 위폐문제 제기 및 해외 자산에 대한 동결 조치 등이 취해지면서 북핵 사태는 또 다시 교착상태에 빠져들었다. 결국 9/19 공동선언에도 불구하고 북미 양측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경우에 따라서는 북핵과 관련한 위기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 로드맵을 구상함에 있어, 미국의 강압외교와 이로 인한 위기 관리방안을 미리 준비

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

1. 미국의 매파 협상전략(Hawk Engagement)와 강압외교

2005년 9월 베이징 공동선언 이후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던 미국의 강압외교가 2006년 상반기 들어 다시금 활발해 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는 9.19 공동선언이 비록 ‘말 대 말’의 합의를 도출하였으나 이후 ‘행동 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협상의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 놓으면서도 한편 북한을 압박하려는 미국의 강온책이 동시에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은 부시 행정부의 기본적인 북핵 외교전략에 기인한다. 현재 미국 국가안보회의의 한반도 담당을 맡고 있는 빅터 차 박사

에 의해 주장된 매과 협상전략이 바로 그것이다.¹⁾ 그에 의하면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을 전략적인 차원에서 수행해야 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나중에 강압외교를 보다 수월하게 수행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된다. 즉, 비밀 농축우라늄 프로그램 개발 의혹 등 북한의 지금까지 행보가 핵 포기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지만, 북한의 거짓을 보다 명백하게 확인하고 국제사회에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선은 진지한 협상을 한번 더 시도해 볼 전략적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혹시라도 북한의 핵 포기를 이루에 낼 수 있으면 좋고, 아닐 경우 핵 협상 파기의 책임을 전적으로 북한에게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후 미국이 본격적인 강압외교나 압박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보다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베이징 6자 회담은 이러한 미국의 협상전략 목표에 안성맞춤인 시험장으로 여겨진다. 여기에서 미국이 평화적 핵 해결에 대한 성의와 의지를 여타 국들에게 충분히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이 핵 포기 협상을 지연하거나 파기시킬 경우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요 당사자들이 미국의 압박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베이징 6자 회담의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그 속에서 북한이 이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사태를 악화시키거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전면적인 벼랑 끝 전술로 나올 경우 이에 대한 미국의 강압외교와 압박은 전격적으로 가동될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미북 양측가운데 누가 먼저 파국의 빌미를 제공하느냐가 될 것이다. 현재 북한은 최근 미국의 위폐문제와 관련한 대북 금융제제를 빌미로 회담참가를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북핵 문제의 대승적 해결을 위해 미국의 보다 유화적인 접근을 바라는 한국 및 중국의 동정을 얻기도 하고 있으나, 6자회담 자체를 거부하는 이유로는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북한의 지속적인 6자회담 거부는 미국으로 하여금 최악의 경우 회담의 결렬을 북한 탓으로 전가하고 본격적인 강압외교를 실시할 좋은 구실을 마련하

1) Victor D. Cha, "Korea's Place in the Axis," Foreign Affairs, (May/June 2002)

여 줄 가능성이 크다. 물론 미국 역시 주변국의 우려를 무시하고 초기부터 강경일변도의 정책을 편다면 6자회담 결렬의 책임을 북한과 함께 떠맡을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6자회담과 관련한 북미 양측의 줄다리기 외교는 더욱 치열해 질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미국 강압외교의 정당성과 성패 가능성이 결정될 수 있다.

2. 강압외교의 방법

국제정치 이론에 의하면 강압외교의 전략은 위협수단의 종류와 정도, 요구와 위협의 긴박성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첫째로 가장 느슨한 형태의 강압외교로는 "시험과 관망 (Try and see)" 전략이 있다. 이는 상대방에 일정한 요구를 하고 특정한 압박을 가하면서 상대방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보는 전략이다. 여기에는 상대방이 요구를 언제까지 수용 할 지의 시한이나 요구 불이행 시 어떤 대가를 치를 지 명시하지 않는다. 대신 여러 종류의 압박을 시험하면서 상대방의 반

응을 그 때 그때 점검해 본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압박의 강도와 긴박성이 떨어지는 전략이다. 두 번째로 첫 번째의 경우와 같이 시한의 긴박성은 없지만 상대방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수록 서서히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점진적 나사 조이기 (Gradual Turning of the Screw)" 전략이 있다. 이 경우에도 특정한 시한을 정하지는 않지만 압박의 강도를 점점 증가시킴으로써 상대방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한다는 점에서 "시험과 관망" 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전략으로 "묵시적 최후통첩 (Tacit Ultimatum)"을 들 수 있다. 이 경우는 비록 상대방에게 특정한 시한을 정하지는 않더라도 사태의 위급성을 충분히 전달하거나, 혹은 특정한 처벌내용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심각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암시를 줌으로써 상대방에게 요구의 심각성을 보다 강하게 전달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최후통첩 (The Ultimatum)" 전략이 있다. 이 경우는 그야말로 상대방에게 특정한 시한까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특정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가장 강한 압박을 제기하는 전략이

다. 이러한 네 종류의 강압외교는 한편 여기에 압박만 행사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의 경우 유인책을 함께 제시할 것인지에 따라 다시 나뉘어 진다. 특히 강압외교의 일반이론은 상대방으로 하

여금 요구조건을 수용케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압박과 함께 유인책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²⁾

표 1. 강압외교의 전략

	요구조건	시한	처벌내용
최후통첩 (The ultimatum)	명확	명확	명확
묵시적 최후통첩 (Tacit ultimatum)	명확	불명확 그러나 위급성 암시	불명확 그러나 심각한 처벌 암시
점진적 나사 조이기 (Gradual turning of the screw)	명확	불명확	점진적 증가
시험과 관망 (Try-and-see)	명확	불명확	불명확

미국은 핵 포기든 도발이든 북한의 본색을 드러내기 위한 매과 협상전략에 따라 이미 전방위 적인 압박외교를 서서히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 행해진 마카오의 북한 해외 자금망에 대한

압박이나 위폐 문제 제기 등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2005년 9월 미국 재무부는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은행 (BDA)을 북한의 불법 돈세탁 채널로 지목하고 북한이 예치해 놓은 2400

2) Alexander L. George, "Coercive Diplomacy," Robert Art and Kenneth N. Waltz ed., *The Use of Force: Military Power and International Politics*(New York: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4), pp. 70-76.

만 달러를 압류조치 하였다. 이후 북한의 지난 20년간 주요 대외교역 창구였던 BDA는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하면서 2005년 말부터 북한의 온라인 대외 교역자금 결제가 사실상 마비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미국의 강력한 경고성 조치로 BDA가 거의 파산상황에 이르렀는 것이 알려지면서 20여 개에 달하는 외국의 여타 금융기관이 북한과의 거래 중지를 추가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이 미국의 강력한 경고성 조치로 BDA가 거의 파산상황에 이르렀는 것이 알려지면서 20여 개에 달하는 외국의 여타 금융기관이 북한과의 거래 중지를 추가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³⁾

그 결과 북한은 유럽과 일본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한편 김정일의 개인 비자금 상당부분이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미국 정부에게 생각 이상의 새로운 압박 카드를 발견한 계기를 마련해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본격적인 금융제재를 하지 않고 금융 압박만 했는데도 북한의 온라인 대외 결제 마비 사태가 발생하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압박의 주요 수단 중 하나로 여겨온 경제 제재에 대한 새로운 자신감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6자 회담 복귀에 대한 중용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금융제재 해제를 회담참가의 기본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미국의 압박을 역으로 핵 협상 카드에 이용하려 한다는 분석과 함께 실제 북한이 이 조치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한편 이미 많은 논란 속에 제정된 북한 인권법을 바탕으로 탈북자의 난민 지위 부여 등을 통한 국제적 해결이나 북한내의 인권사항개선 등에 관한 촉구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006년 4월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탈북자 5명을 면담하고 인권과 자유가 없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미국의 임무를 강조하였다. 동시에 제이 레프코 위츠 미 대북인권특사는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을 통해 탈북자와 대북 지원의 모니터링, 개성공단에서의 노동착취

3) Testimony of Stuart Levey, Under Secretary of Terrorism and Financial Intelligence,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Senate Appropriations Subcommittee on Transportation, Treasury, the Judiciary,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and Related Agencies (Washington D.C., April 6, 2006, JS-4163) <http://www.ustreas.gov/press/releases/js4163.htm>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리고 마침내 2006년 5월 미국 정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 6명에게 이례적으로 '정치적 망명'을 허용했다. 비록 금번 조치가 북한 주민의 대량 탈북으로 당장 이어지는 않을 지라도, 만일의 경우 인권을 이용한 북한 체제 압박이 본격화 될 수도 있다는 강력한 경고의 효과를 가질 것이다. 실제로 대북인권법안을 최초 입안한 것으로 알려진 미 허드슨 연구소의 마이클 호로비츠 연구원은 기자 회견에서 앞으로 탈북자에 대한 정치적 망명 허용의 범위가 수천명 단위로 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취해진 미국의 강압외교는 "시험과 관망" 및 "점진적 나사 조이기" 전략의 혼합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6자회담을 위한 각국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강압외교로 가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에 기초한다. 대신 북한의 성실한 회담참가를 위한 압박 혹은 북한의 회담에 임하는 진의를 파악하기 위한 수준의 압박 전략을 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북한이 핵 개발을 경고하는 수준에서 다양한 체제 가능성을 암시하

면서도 언제까지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해야 한다는 특정한 시한을 설정하지도 않고, 혹은 핵을 개발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처벌이 가해 질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구체적 시한이나 제재를 설정한 상태에서 북한이 이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올 수 있는 정치, 군사적 부담과 이러한 전략이 오히려 북한의 강한 반발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로 보여진다.

6자회담이 결렬이 가시화 되지 않는 한 당분간 미국의 강압외교는 낮은 차원의 압박전략 속에서 시행될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최근의 움직임은 미국이 압박의 강도를 서서히 높여감으로써 직접적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것은 피하면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암시하는 쪽으로 서서히 전환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와 동시에 미국은 북한에 대한 회유책 또한 제시하면서 북한의 회담 복귀 및 협상을 유도하고 있다. 2006년 5월 미국측 6자회담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마카오 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이 2천만 달러이지만, 북핵 공동성명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못 받고 있는 에너지

지원으로 인해 북한은 현재 매달 8천만달러를 손해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북한의 즉각적인 6자회담 복귀와 공동성명 이행을 촉구했다. 동시에 뉴욕 타임즈 보도에 의하면 미국 행정부는 북한과의 평화협정을 핵 협상과 동시에 추구하는 방안을 새로이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하였다.⁴⁾ 이는 미국이 앞의 강압외교의 이론에서 본 바와 같이 압박과 회유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북한의 회담복귀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아직은 북한의 핵 협상에 대한 의지를 진지하게 타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회담이 결렬될 경우 북한에 대한 본격적인 강압외교를 펴기 위한 명분축적의 이중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은 북한이 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것과 공동선언 상의 합의된 핵 위협제거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변함없는 미국의 입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미국이 평화협정 협상에서 다루고자 하는 정치변화, 인권, 테러리즘, 개방 등의 폭넓은 의제에 합의 할지도 아직은 미지수이다.

만일 북핵 사태가 북한의 핵 협상 회담 거부나 과거 선언 등으로 인해 다시 위기에 빠진다면 미국은 전방위적인 압박외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우선 북한의 주요 외화 획득 수단인 위폐나 마약 등의 불법거래를 전면적으로 추적 적발하는 한편, 파악하고 있는 김 정일 정권의 해외 은닉 자산에 대한 전면적인 동결, 보다 본격적인 금융제재를 통한 자금흐름의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또한 북핵 문제를 정식으로 UN 안보리에 상정하여 이 문제를 국제안보위협으로 규정하고, 국제적 차원의 경제제재 및 압박을 촉구할 것이다. 이 경우 미국의 강압외교는 서서히 압박을 증가하는 전략과 함께 보다 심각한 암시적 최후통첩 전략의 혼용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버티기가 지속된다면 전면적이고 실질적인 경제봉쇄에 이어 북한 대량살상무기의 밀반출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PSI를 통한 해상봉쇄를 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에 대한 검문 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해상에서의 무력시위를 행사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해

4) David Sanger, "U.S. Said to Weigh a New Approach on North Korea," New York Times (May 18, 2006)

상봉쇄는 결국 양측의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미국은 쿠바에 접근하는 모든 소련선박에 대하여 해상봉쇄 조치를 취하였다. 당시 쿠바 해역을 봉쇄한 미해군 함정과 쿠바로 향하던 소련 선박들간에 일촉즉발의 충돌의 위기상황이 벌어졌으나 마지막 순간 모스크바의 타협에 의해 소련 선박들이 회항함으로써 위기가 모면된 사례가 있다. 만약 한반도를 둘러싼 해상에서 미국의 북한 선박에 대한 봉쇄가 행해질 경우에도 양측간의 충돌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하며, 이것이 양측이 원하지 않는 전면적 대결로 악화될 개연성도 존재한다. 특히 북한이 소련과 달리 서해상의 경우와 같은 군사적 도발을 할 경우 미국은 교전수칙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군사행동을 취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과 핵 위협이 명백하지 않는 한 미국이 먼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하기는 쉽지가 않다. 북핵의 제거를 위해 수천 수백 개로 나뉘어 있거나 지하의 비밀 시설에 숨겨져 있는 북한의 핵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것은 우선 그 성공여부에 대한 불확실성과 너무나 높다. 더욱 문제는 아무

리 제한적 정밀 타격이라 하더라도 선제공격은 한반도에서의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비록 한미 연합군이 북한의 군사력을 압도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군과 시민 모두에게 예상되는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미국이 군사행동은 이라크에 비해서도 훨씬 큰 제약을 받는다. 또한 이전 같지는 않더라도 중국과 북한간의 전통적 유대관계와 이 지역에서 날로 증대되고 있는 중국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 미국의 선제공격은 한미간에 돌이킬 수 없는 양국관계의 장기적 손상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현재 미군의 상당부분이 이라크 및 중동지역의 테러와의 전쟁에 동원되어 있는 가운데 대대적인 새로운 충원 없이는 현재의 인원으로서는 미군 전체의 전쟁 수행 능력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미국이 한반도에서 독자적 전쟁을 일으키기에는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너무나 부담이 크다. 따라서 미국에게 있어서 군사행동은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이 될 것이다. 이는 북한이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를 이용하여 미국이나 그 동맹

국에 군사도발을 하거나 이러한 무기를 미국에 적대적인 테러집단이나 적국에 이전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포착되지 않는 한 미국이 군사행동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북한의 반응

현재 북한은 미국의 압박외교에 강한 반감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인권법안에 대해서는 북한체제를 압살하기 위한 정책으로 부시 행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최근의 위폐 문제에 있어서도 이를 북핵 문제와는 별도로 취급하려는 미국의 입장에 반발하여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베이징 공동선언문의 취지에 상반되는 이중적 조치로 비난하면서 6자 회담 재개를 거부하는 빌미로 삼고 있다. 한편, 현재 미국의 북한 압박조치의 효과에 대해서는 국내외적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미국의 위폐 및 해외 자금망 압박이 기대 이상의 부담을 북한에 초래하였다는 평가가 있으며, 이는 북한 정부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를 협

상하려는 북한의 태도가 반증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압박은 결국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켜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 또한 상당한 힘을 얻고 있다. 최근 북한 김정일 정권이 향후 3년간 내치를 다지는 문건을 발표한 것이 부시 행정부와와의 협상을 포기하고 이후를 기약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미국이 본격적인 강압외교에 돌입할 경우 북한도 이에 대항하여 보다 강경한 자세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미국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자극적 성명과 이를 과시하기 위한 일련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벼랑 끝 전술로 나타날 것이다. 예상 가능한 조치로써, 경수로의 본격적 재가동 선언이나 시위, 새로운 장거리 미사일 실험, 핵 무기 제조 관련 고품 실험의 재개 등이 있다. 최후의 수단으로 핵무기가 있음을 보다 구체적으로 천명하거나 이를 입증하기 위한 핵 실험을 실시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한미양국 정부 당국자가 북한의 새로운 미사일 실험 가능성에 대한 공식적 경고를 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언

론의 보도에 의하면,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새로운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은 최근 미국의 금융제재와 인권 문제 확대에 대한 강한 불만의 표시로 보이고 있는 나쁜 압박과 벼랑 끝 전략의 일환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이러한 북한의 전략은 북핵을 둘러싼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 평화적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북한의 전략은 북미 사이를 중재하려는 한국정부의 입지를 결정적으로 약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북한 역시 먼저 미국의 강압외교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도발을 쉽게 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자체적인 비상사태선포나 강화된 군사훈련을 시행 할 수 있다. 또한 비무장지역 및 서해나 동해를 포함한 해상에서의 무력시위를 통해 긴장을 조성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해상봉쇄와 같은 구체적 압박이 시행 될 경우 이에 대한 대치과정에서 양측의 우발적 무력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 이 경우 비록 양측이 원치 않더라도 전면적인 군사충돌로 상승할 위험성이 높아질 것이다.

한편 가증되는 미국의 강압외교에 맞서기 위한 방법으로 북한은 남한과의 민족공조를 더욱 강조할 것이다. 즉,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충돌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그 모든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려 할 것이다. 동시에 남한으로 하여금 미국의 전쟁도발 음모에 가담하지 말 것을 촉구하면서 민족공조를 호소하는 평화공세를 펼 것이다. 최근 김대중 대통령의 북한 방북에 대해 북한이 호의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더 나아가, 제2의 정상회담을 통해 국면전환을 시도할 수도 있다. 얼마전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많은 양보를 언급하고 정상회담의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점도 이점에서 흥미롭다. 그러나 과연 북한이 한국의 평화공세, 혹은 중재를 받아들여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것은 미국적대정책의 확실한 포기와 수령체제옹호이며 이것은 한국이 담보할 수가 없는 사항이다.

궁지에 몰린 북한이 어쩔 수 없이 협상에 본격적으로 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경우에도 과연 진정한 핵 포기를 위한 것인지, 아니며

단순히 압박을 완화하고 한국을 포함한 국제여론의 동정을 사기 위한 것인지의 구분이 힘들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완전히 핵을 포기하는 검증 과정 자체가 상당히 고통스러운 조건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현재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안전보장과 관계정상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완전하게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 계획의 포기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CVID)를 기본전제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북한이 만일 이를 받아들인다면 이를위해서 북한은 북한 전역에 의심되는 모든 군사시설과 비밀 지하 시설들을 미국이나 국제기구에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이라크의 경우를 보더라도 미군이 전쟁 승리 후 완전 점령한 상태에서 도시와 사막에 흩어진 시설들을 최종 점검하는데에 일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에 대한 완전한 핵 사찰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로 여겨진다. 더구나 미국은 북한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관계정상화를 위해서는 핵 문제 뿐 아니라 재래무기를 포함한 군비축소, 북한의 정치 상황 및 인권문제, 여타 불법행위 등을 총괄하는 포괄

적 의제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압박에 의한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그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할 것이다.

4. 주변국의 반응

일본은 미국의 강압외교에 가장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다. 특히, 북한이 이에 대항하여 동해상으로의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을 할 경우 일본의 강압외교도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일본은 2006년 5월에도 북한의 선박에 대하여 마약밀수 혐의로 전격적인 수색을 실시하는 등 미국의 대북한 강압외교에 보조를 착실히 하고 있다.

중국은 여전히 미국의 강압외교에 가장 소극적이다. 특히 북한이 핵실험과 같은 심각한 행동을 취하지 않는 한 미국의 안보리 체제나 경제제재 동참요구 등에 미온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현재로써 중국은 북한이 공식적으로 핵개발을 선언하거나 실험하지 않는 한 급격한 상황변화보다는 현상유지를 선호한다. 미국이 본격적인 경제제재 등

을 포함한 강압외교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중국이 기본적인 경제 지원을 계속하는 한 북한에 대한 그 실질적 효과는 미지수이다. 더구나 혹자는 현재 한국과 미국이 대북정책에 이견을 보이는 상황에서 중국이 나서서 미국을 도와 북한을 압박할 동기를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북한의 인권사항에 대한 강조나 탈북자에 대한 난민 지위 부여요구 등은 중국에게 자신들의 인권사항과 관련된 국내 정치적 과장을 고려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탈북자의 난민지위 부여는 중국으로의 대량탈북을 유도 내부 불안을 일으킬 뿐 아니라 북한의 정권 붕괴 및 혼란을 가져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실질적인 국가이익과 기본적으로 어긋나는 사안이다. 그러나 미국의 강압외교에 대해 북한이 핵 실험 등 극단적 대응으로 나오거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중국도 최악의 혼란을 막기 위한 차선책으로 미국의 강압외교에 동참하거나 북한내부의 정권교체 등을 고려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미국과의 은밀한 협의를 통해 남북분단과 북한체제의 유지를 전제로 핵 포기

협조할 새로운 정권으로의 김정일 정권의 체제변환을 합의하는 미중간 빅딜의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러시아는 일본과 중국의 중간자적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핵 위협이 지속될 경우 이를 규탄하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미국의 유엔 안보리 제재요구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 외에 미국의 PSI가 발동 될 경우 북한과의 접경지역에서의 육상검문활동에 협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면적인 압박이나 군사대치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나름대로의 중재자 역할을 제안하며 자국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려 할 것이다.

EU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북한의 핵무기제거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지지할 것이다. 한편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무력충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미북 사이의 협상을 독려할 것이다. 이 가운데 양측이 원한다면 제2의 제네바 협의회와 같은 중립적인 위치에서의 협상장소 제공 및 더 나아가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수도 있다.

5. 한국의 대응방안

현재 한국정부는 북핵의 평화적 협상에 최고의 목표를 두고 노력 중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과 북한의 요구를 절충하는 선에서 양자에게 각기 입장을 조금씩 양보할 것과 함께, 가능하다면 이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 중재 역할을 할 것을 희망한다. 결과적으로 한국정부는 미국의 강압외교에 대한 회의적인 자세를 보인다. 한국정부는 미국의 강압외교가 북한으로 하여금 회담을 거부하고, 핵 포기 자체의 의의를 의심케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파악한다. 이는 회유보다는 압력이 북한의 핵 포기를 중용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믿는 미국정부의 매파협상전술과 기본적으로 다른 입장을 보인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최근 불거진 북한의 위폐문제나 인권문제 제기 등에 관한 우리정부의 소극적 대응내지는 이에 따른 미국정부와의 미묘한 갈등으로 드러나고 있다. 북핵 협상의 지연 혹은 파기 속에 미국정부가 본격적인 강압외교를 강화해 나간다면 이는 한국정부에게는 심각한 딜레마와 함께 미국정부와의 마찰을 가져올 소지가 크

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북한의 민족공조 전술에 상당한 유혹과 함께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다. 최근 한국정부는 미국의 심화되는 강압외교에 대한 불만과 이견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의 탈북자 망명허용에 이어 나온 노 대통령의 많은 양보 발언은 미국과 한국정부의 북한 정책에 대한 대립의 양상으로 보이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미 신년초 기자회견에서 한미간에 북핵문제에 관한 갈등이 없음을 강조하면서도, 미국행정부내에 북한과의 갈등을 조장하는 "일부 세력"이 득세할 경우 한미간에 심각한 충돌이 있을 수 있음을 경고한바 있다. 문제는 그것이 현실화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레프코위츠 대북특사의 개성공단 노동자 인권관련 문제제기에 대해 이 종석 통일부 장관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개성공단은 중단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하였다.

과연 한국정부의 계산은 무엇일까? 우선은 한국정부가 진정으로 북한에 대한 포용만이 북핵을 포기하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가능성이다. 또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북핵의 협상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미국의 압박은 한반도에 무

력충돌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압박보다는 회유를 통해 사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실리론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강압외교 속에서 북측을 설득하고 협상을 재개시키기 위한 적극적 중재 노력의 일환으로 오히려 북한에 대한 회유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사파견, 2차 정상회담, 한반도 군축과 평화협상 및 북한에 대한 전면적 경제지원 등을 제안,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미북이 서로 불신하는 가운데 상황이 악화된다면 한국으로서도 중재노력의 한계를 느끼게 될 것이다. 북한의 지속적인 회담거부와 도발적 태도는 북한에 대한 국내 여론을 악화시킬 것이며, 정부의 포용정책과 중재노력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질 것이다.

만일 양측의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북한이 새로운 미사일 발사, 소규모 군사도발, 핵 보유선언 및 핵실험의 수순으로 긴장을 고조시킨다면 결국은 한국정부로서도 미국의 강압외교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미국과의 협력을 어느 정도로 조절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한반도 무력충돌의 위

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될 것이다. 또한 이는 한국으로 하여금 김정일 및 북한 체제의 변환 가능성과 이 과정에서 미중을 포함한 주변 강대국과의 조율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철저한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국이 미국에 대해 회유는 없고 강경책만 있다고 비판한다. 이에 대해 미국은 한국 역시 회유만 있고 강경책은 없다고 응수한다. 문제는 양측의 상반되는 입장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점이다. 한국의 북한에 대한 유화적인 태도는 김대중 정부 이후 수립된 햇볕정책의 기초 속에서 북한의 극단적 반응에 따른 한반도의 위기를 초래치 않으려는 실질적 고려가 혼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정부의 태도는 효과적인 협상을 위해서는 강압과 회유가 함께 결합되어야 한다는 외교협상의 기본이론을 무시하고 있다. 즉 강압외교도 그야말로 외교의 일부이며, 강압이 때로는 외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기본명제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북핵의 외교적,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회유와 함께 강압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우리의 전략적 유

연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또한 한국의 미국정부에 대한 불만과 마찬가지로 한국정부의 일방적인 회유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미국정부와의 효과적 공조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북핵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한미 양국의 협상전략을 상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한국의 일방적인 회유는 미국의 압박에 의해 북한에 근본적인 유인책이 못되며, 미국의 제재 역시 한국의 대북지원에 의해 그 효과가 반감된다. 결국 양측이 공조에서 얻을 수 있는 시너지효과를 반대로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미는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북핵이 자국의 안보에 미치는 우선순위에 있어 이견을 가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한반도 지역의 평화와 북핵의 궁극적인 제거에는 공통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공유한다. 양국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서로가 공유하는 목표의 달성을 위해 결국은 서로가 필요한 한배를 탄 운명공동체라는 점을 하루 빨리 인식해야 한다. 문제는 현재 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의 입장차

이가 근본적으로 좁혀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가장 희망하는 협상에 의한 핵 문제 타결의 가능성은 북미 어느 한쪽이 자신의 근본적인 이익을 포기하지 않는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양쪽 다 이와 관련하여 사활을 건 대결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현재의 소강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수도 없다. 북한이 부시 행정부 이후를 기약하여 2년 후 민주당 행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9/11 이후 미국의 대북 정책의 근간이 다시 클린턴 행정부 시대로 돌아갈 가능성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발상이다. 더욱이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이 협상을 지연 시키면서 핵 개발을 착착 진행하는 현 상황을 마냥 기다릴 수도 없다. 당분간 미국이 한, 중과 함께 입장을 조율하며 6자회담에 좀 더 기회를 준다 하더라도 북한의 태도에 결정적 변화가 없는 한 어느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강압외교를 시행할 것이다. 그리고 그 주어진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아 보인다. 혹자는 북한의 우라늄을 이용한 핵 개발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는 시점이 언제 일지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며 그것이 상당히 빨리 1, 2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예측한다. 이 경우 한반도의 상황은 그야말로 격랑의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럴 때 일수록 그 어느 때 보다 긴밀한 한미 공조가 위기관리에 중요할 것이다.

한국이 미국에 대해 북핵 문제를 보다 유연하게 접근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강압외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 강압과 회유의 적절한 조화는 한국이 주장하는 회유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도 더욱 중요하다. 한국의 이러

한 입장변화는 미국에 한국의 입장을 설득함에 있어서도 보다 힘을 실어줄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얻어지는 한미간의 대북 정책공조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양국의 노력에 상승의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EAI 국가안보패널 NSP 보고서 시리즈 소개”

1. 북핵문제와 6자회담 (하영선·전재성 2004. 6. 17)
2. 이라크 파병과 국가이익 (김성한 2004. 8. 4)
3. 주한미군 재배치와 21세기 한국의 신안보전략개념 (한용섭 2004. 9. 24)
4. [개정본] 북핵문제와 6자회담 (하영선·전재성 2004. 10. 22)
5. 2004 미국대선과 한반도 (장 훈 2004. 11. 1)
6. 북한체제위기와 한국의 대북정책 (신성호 2005. 1. 26)
7. 일본의 안보선택과 한국의 진로 (박철휘 2005. 3. 22)
8. 21세기 중국의 대외전략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이태환 2005. 5. 25)
9. 정보화시대의 군사제국: 미 군사변환의 세계전략과 네트워크
(이상현 2005. 10. 04)
10. 미국의 동아태 전략 : 변화와 지속성 (김성한 2005. 11. 17)
11. [제2차 개정본] 북핵문제와 6자회담: 평가와 전망
(하영선·전재성 2006. 1. 2)
12. 동북아 경제협력과 한국의 FTA 전략: 참여정부의 FTA 정책 평가
(정진영 2006. 1. 2)
13. 확산안보구상(PSI)과 한반도 (신성호 2006. 1. 25)
14. 한반도 평화체제 (전재성 2006. 7. 3)
15. 북핵과 강압외교 (신성호 2006. 7. 12)
16. 한반도 평화 로드맵 (하영선 근간)
17. 북미관계정상화 (박종철 근간)

18.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모색 (서병훈 근간)
19. 새로운 남북경협 패러다임 (오승렬 근간)

국가안보패널보고서 15호 부/록/안/내

"북핵과 강압외교"

<부록1> 미 재무부 자료

Testimony of Stuart Levey, Under Secretary of Terrorism and Financial Intelligence,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Senate Appropriations Subcommittee on Transportation, Treasury, the Judiciary,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and Related Agencies

April 6, 2006

<http://www.ustreas.gov/press/releases/js4163.htm>

<부록2> 미 국무부 자료

Jay Lefkowitz, "Freedom For All Koreans," Op-Ed in the Wall Street Journal (Asian and European editions),

Washington, DC

April 28, 2006

<http://www.state.gov/p/eap/rls/rm/66928.htm>

<부록3> 북한 발표자료

조선외무성 대변인, "미싸일발사는 정상 군사훈련의 일환,"

2006년 7월 6일

조선외무성 대변인, "금융제재해제가 미국의 정책변화의지 징표,"

2006년 2월 9일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제재와 압력은 6자회담재개의 차단물,”

2006년 1월 17일

조선외무성대변인, “미국측의 태도를 계속 주시할것,”

2005년 5월 22일